

# 2022학년도 고3 3월 정법하는 다림쥐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 사회탐구영역 ·

### 정치와 법 정답

1	③	2	⑤	3	②	4	②	5	⑤
6	④	7	③	8	⑤	9	①	10	①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②
16	⑤	17	①	18	②	19	⑤	20	④

### 해설

####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파악

A는 정치 권력을 행사 및 획득하는 것만을 정치로 보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조정도 정치로 보므로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해설]** 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② 정치는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다. ③ 주민 공청회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만 해당한다. ④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한다. ⑤ 국회의원 선출 투표는 국가 권력 행사 및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에 해당한다.

#### 2. [출제의도] 기본권의 이해

'능동적 권리인가?'라는 질문으로 A, C를 구분할 수 있고,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권인가?'라는 질문으로 B, C를 구분할 수 없다. 이때,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권'은 사회권과 참정권, '구체화할 수 없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므로 B, C는 사회권과 참정권 중 하나이다. 이때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에 해당하므로 C가 참정권이 된다. 이후 A는 평등권, B는 사회권으로 결정된다.

**[해설]** ① 자유권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②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기본권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고전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 3.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

**[해설]** ① 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투입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 결정 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으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사법부가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일반 국민의 피드백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환류(피드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⑤ 투입과 산출, 환류는 모두 문화, 생태, 경제, 사회 등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4.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이해

A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에 맞기만 한다면 법의 내용과 목적을 묻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A로 인한 합법적 독재가 일어나 B로 발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해설]** 1.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반면,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보다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다. 2. '과잉 금지 원칙'의 적용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 3.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저항권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경우 국민이 저항할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 4.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통치 권력이 형식적인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5.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 파악

을국은 의회 과반수 의석 정당이 B당임에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A당이므로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이때, 발문에서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채택한다고 하였으므로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다.

**[해설]** ① 권력 분리의 원리가 엄격하게 구현되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②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므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 인물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대통령제를 행정부 수반의 일원화로 설명한다. ③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므로 독립적으로 조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⑤ 을국은 갑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 갑국의 경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의회 과반수 의석 정당이 가당이므로 가당이 단독 내각을 구성한다. 이때 다른 정당의 견제와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 등 견제 수단이 활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을국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므로 을국이 갑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 6.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파악

성향에 맞는 정당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리 A는 국민주권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적 정권 교체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이다.

**[해설]** 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이다. ②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수단을 통해 실현되는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이다. ⑤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 7.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 파악+이해

1. (가)판단  
1) A는 B, C와 달리 공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A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2) B는 A,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B는 정당이다.  
3) C는 시민 단체로 결정된다.

2. (나)판단: 갑만 옳음  
1) A는 B, C와 달리 공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A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다.  
2) 을의 말이 틀렸으므로 B는 A,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C는 정당이다.  
3) B는 시민단체로 결정된다.

3. (다)판단: 을만 옳음  
1) 갑의 말이 틀렸으므로 A는 공익을 추구한다. A~C 중 두 집단이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 B는 A,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므로 B는 정당이다.  
3) 따라서 A는 시민단체 C는 이익집단으로 결정된다.

**[해설]** ①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A이다. ② 정치적 총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 ③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만의 특징이다. ④ (가), (다)의 경우 B는 정당이다. 그러나 정당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8. [출제의도]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파악

지방 행정의 총 책임자인 A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특성에 맞는 행정입법을 담당하는 B는 지방 의회이다.  
**[해설]** ① 지방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지는 것은 지방 의회이다. ② 소속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례 대표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 제도에 의해 해임될 수 없다. ④ 지방 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은 지방 자치단체 기관 간의 상호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⑤ 지방 의회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상호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 9. [출제의도] 국회의 입법 과정 이해

**[해설]** 가. 헌법의 개정 제안은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으로 절반 이상인 170석을 획득한 A당의 소속 의원만으로 헌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법률안 제출은 정부와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라.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10.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

A는 헌법 소원에 대해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이다.  
**[해설]** 가.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위원적인 직무 집행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는 헌법 소원으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체 절차를 모두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는 후방 적시 요구 행위로 인해 연이될 공익보다는 의의 피의자 신분 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법원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헌법 소원에 대한 판결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위원 의결로 결정된다.

#### 11.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파악+이해

갑이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A를 이유로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을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며 B를 이유로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되면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해설]** ①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갑은 권리의 사회성보다 권리의 불가침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② 을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므로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하

면 안된다는 말을 통해 계약의 자율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국가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④ 소유권 행사가 공익을 해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원리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공정의 원칙은 모두 현대의 사법 관계에서 적용되는 민법 원리이다.

**12.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파악+이해**

**[해설]** ㄱ.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제한 능력이자 해당한다. 이때 갑이 맺은 계약은 제한 능력이자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이므로 갑은 자전적 매매 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확장 청구권은 을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ㄴ선지와 같이 단정지어 서술할 수 없다. ㄷ. B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상 제한 능력이자이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제한 능력이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므로 B는 A가 선물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또한, B의 법정 대리인인 C는 B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C도 A의 선물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ㄹ. A가 계약 당시 법률혼을 하였다면 A는 성년 의제되어 민법상 성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가 B에게 선물한 행위는 A에게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13. [출제의도]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제도 이해**

**[해설]** ㄱ.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 발부 전 법관과 대면하여 영장 발부의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 수사 중에서의 석방을 위해 구속적부심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의 재판이 1심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갑이 요청한다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ㄷ. 재판 이후 형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관이 아닌 검사이다. ㄹ. 갑이 재심 제도를 통해 무죄를 받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과 상고심 이후 집행된 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이해**

**[해설]** ㄱ. 채무 불이행은 사장인 갑이 병에게 지는 것으로 을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ㄴ. 피고용자인 을이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을의 사용자인 을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을이 휴대폰을 본 사(부주위의한 사이)에 병의 개가 정을 물어 다치게 하였으므로 을은 정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ㄹ. 정은 병의 행위를 병의 개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 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정은 무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

갑의 사용자 을은 갑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부당 노동 행위로 해고당했다고 할 수 있다. 병의 사용자 정은 병을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병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ㄱ. 갑은 적법하게 파업을 이끌었으므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행정 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ㄷ. 병과 달리 갑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갑만이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을이 갑을 해고한 것만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가족 관계의 종합적 이해**

**[해설]** ① 협의상 이혼은 이혼 신고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의 이혼 판결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갑이 C를 인지했다면 C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③ 양육과는 관계없이 을과 A와의 친자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을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친자 관계가 유지되는 부모 갑, 을은 모두 B가 사망 시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B를 병이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B와 을과의 친자 관계가 단절된다. 따라서 B는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7.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요건**

갑의 행위는 현행범 체포로 구성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모두 인정되지만,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에서 공동적으로 인정되는 B는 구성 요건 해당성, A에게만 해당하는 A는 위법성이다. 이에 따라 C는 책임으로 결정된다.

**[해설]** ㄱ. B는 범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ㄴ. 갑의 행위는 위법성 즉, A가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ㄷ. 을이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을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없다. 만약 을이 10세였다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ㄹ.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형 감경 사유로, 심신 상실자의 행위가 책임이 조각된다.

**18.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 이해**

갑은 부당해고, 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해설]** ② 을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여부를 다루는 소를 제소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의 투쟁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면 노동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출제의도] 국제법의 법원(法源)**

A는 국제법상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적 확신이 생긴다면 하나의 국제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통해 국제 관습법임을 알 수 있다. B는 국제 관습법의 내용을 '성문화'한다는 것을 통해 조약임을 알 수 있다.

**[해설]** ① 국제 관습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조약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이 가능하다. ③ 국제 관습법과 조약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④ 먼저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를 권한을 갖는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더라도 대통령령 등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⑤ A만이 국제 사회 전체에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으며, B는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20. [출제의도] 선거의 종합적 이해**

**[문제해결]**

1) 현행

현행에서의 선출 방식대로 선출을 한다면 지역구 순서대로 A, B, A, B, E, A당이 선출된다. 이후 비례 대표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계산	1.52	1	0.8	0.4	0.28
정수	1	1	0	0	0
소수	1	0	1	0	0
비례	2	1	1	0	0
지역	3	2	0	0	1
총합	5	3	1	0	1

2) 개편안

개편안에서의 비례 대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계산	3.8	2.5	2	1	0.7
정수	3	2	2	1	0
소수	1	0	0	0	1
총합	4	2	2	1	1

**[해설]** ① 비례 대표 의석을 들리는 방식의 개편안은 사표의 다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에는 '사표의 다수 발생'이 들어갈 수 있다. ② 현행에서 E당은 지역구 의석 1석을 획득한다. ③ 개편안에서 모든 정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획득한다. ④ C당은 현행에서 1석을 획득하였고, 개편안으로 2석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개편안에서의 의석 확보가 유리하다. 또한 D당은 현행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개편안에서 1석의 의석을 획득했으므로 개편안이 의석 확보가 유리하다. ⑤ 선거 제도의 비례성을 계산하면 현행은 12+5+10+10+3=40이고, 개편안은 2+5+0+10+3=20이다. 따라서 선거 제도의 비례성은 개편안이 현행보다 크다.